

테마칼럼

책과 세상

신재생에너지

문화상상력

도시와 인간

품격있는 연안관리로 지역경쟁력을



유병권

아무래도 우리의 국토연안관리는 썩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 내륙도시를 닮은 고층아파트가 산과 바다를 가려 해안 경관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개발이 제한된 지역들의 규제가 풀리면서 대책 없이 훼손되어간다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여객지원의 고갈 등으로 연안도시의 앞날이 밝지않은 셈이다.

그리나나 스페인 같은 유럽의 해안은 경관을 고려한 절제된 토지이용과 다양한 형태의 마리나가 예술작품을 방불케 한다. 스웨덴의 수변도시 함마르비는 경관을 중심으로 한 녹색도시를 지향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는 캠퍼스 자체의 건물 밀도나 높이를 잘 관리하고 있지만 해변 구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 모두가 자연을 존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려는 모습들이며, 우리의 연안관리에 던지는 의미가 크다.

물은 토지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시각적 아름다움을 주고, 레크리에이션도 가능하게 해 준다. 사람과 물건

의 수송도 역할을 한다. 인간에게 유익한 자원을 제공하고 생태적 보호까지 포함 크다. 바다는 그 자체로 공공적 가치가 큰 셈이다.

그러나 우리 바다와 해안은 계획적 보전보다 개발이익을 앞세운 논리에 밀려 무계획적 이용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자연해안선과 갯벌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토연안의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해 국토의 품격도 높이고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선, 연안에 대한 체계적 경관관리가 필요하다. 경관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가 어렵고,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이해를 구하고 함께 가꾸어 나가야 지속가능하다. 연안습지의 보전을 통해 국제적 생태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순천만은 좋은 본보기이다. 경관생태자원을 통해 지역발전, 소득향상,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국토해양부가 지난 5월, 콘크리트 인공구조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해안정비를 자연특성에 맞게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는 지침을 제시한 것은 잘한 일이다. 순천만을 능가하는 더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물째, 국민의 레크리에이션 욕구를 건

전하게 충족시켜야 한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문화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여행객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걷는 운동이 확산되어 올레길, 둘레길과 같은 도보여행길을 찾는 움직임도 많아졌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풍광과 잔잔한 바다는 해안길 탐방이나 해안레포츠를 위해서도 참 좋은 입지이다.

산단단지 못지 않게 자연자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의 바다에 있음을 말한다. 낙후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 특히 내년 5월에 열리는 여수엑스포는 해양의 가치를 국내외에 다시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지역발전자원에서 섬의 재발견이다. 섬은 강, 산, 내륙과 함께 색다른 방언과 풍속을 가진 문화권을 이룬다. 그러나 2010년 국토해양부가 '무인도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섬에 대한 현황과악이나 실태조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바이는 부동산개발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공섬을 만들기도 했는데 우리는 자연이 만들어 준 섬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섬들도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찾고, 수준

높은 문화체질의 장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전남은 2000여 개의 특색있는 섬들을 활용하여 차별적인 관광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연륙교나 연도교 중심의 토목공사보다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이동수요를 충족시키는 근거리 위그선, 수상비행기 도입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알래스카에서 자연보전을 위해 비포장도로를 유지하고, 바다와 산을 연결하는 소형 비행기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국민 전체의 여가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할 시점에 와 있다. 경부선에 이어 2014년 호남선 KTX가 개통되면 내륙 혹은 수도권에서 국토연안에 이르는 시간도 훨씬 짧아질 것이다. 초등학교의 토요일로 가족단위 여행수요가 늘어나고, 소비이력과 문화적 욕구를 가진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도 곧 다칠 전망이다.

늘어나는 국민적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토연안을 보다 품격있게 관리하고 우리 문화의 귀중함을 알리는 활기찬 노력을 기대해 본다.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고칼럼

시대를 진단하라



이원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 경직되고 피곤하며 모두 여유가 없다. 너무 속도가 빠르다 한 번에 끝장을 보려는 현탕주의가 마치 도박을 하듯 무리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심어야 거둘 수 있고 베풀어야 돌아온다. 뉴스를 통해 오늘의 사건사고를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과 기상천외한 사건이 많다.

대낮에 남의 집 대문을 뜯어가 버리지 않는가. 해고에 앙심을 품고 한 회사사에 9번 펀크를 내며, 고압선 동선을 절취해 팔아먹고 गई

레일을 뜯다가 고물로 팔아넘겼다고 한다.

최근에는 교회만 다니며 귀중한 성물들을 훔쳐 팔다 잡혔다.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 도둑질을 하는 세상이니 아무래도 말세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때 우리는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하며 이런 세상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

성경에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집승을 주시면서 하나는 뱀같이 지혜롭고 또 하나는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했다.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조물주 하나님께엔 항상 현재다. 스스로 계산 분야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는 그분의 의도와 뜻대로 다스

리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운행되고 한 치의 오차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안 계산 곳이 없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악한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는 것이요, 불순물과 섞이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며 을 끌고 정의롭게 살라는 말이다. 이 시대는 혼합의 시대다. 사이타 플라도 섞여 마신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외모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분간이 매우 어려운 시대다.

그러나 순결하고 진실하면 더디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자가 된다. 악하고 애매모호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은 현재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나에게 맞추라고 하지 말고 내가 맞추어 살면 된다. 또 너무 티 내지 말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버리고 나와 방법이 달라도 느긋하게 '이 저런 방법도 있구나'하고 상대의 인격과 실력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거기에다 조금 운유하면 금상첨화다. 너무 까다롭다는 인식을 버리고 여유를 가져야 한다. 꼭 오는 내가 아니라도 그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뤄진다.

하나 더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하자. 용서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또 하나 할 수만 있으면 하나가 되는데 일조를 하자. 깨지고 편을 가르고 담을 짓고 담을 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손해를 보고 위신이 꺾이고 체면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해도 포용하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떠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나도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다.

〈광주무등교회 담임목사〉

기고

광주은행 지역민에게 돌려달라



전영복

지난 5월17일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중단됐던 민영화 방안에서 매각방법을 일괄매각으로 변경하고, 최소 입찰가격 요건도 4%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대폭 높였다. 이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있는 지방은행을 지역자본으로 인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지역사회·경제인들의 의욕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지난 14일 국회 정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우리금융 입찰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을 자회사인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괄매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므로써 또 다시 유혹 경쟁 체제 미성립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금융 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은행이 전국에 10개가 설립되었으나 4곳이 구조조정되고 6곳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에 속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우리금융지주의 통제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은행은 아니다.

광주은행은 타 지역 지방은행과는 달리 지난 1968년 지역 상공인 5명이 발기한 순수한 지역 상공인 자본으로 설립된 향토은행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IMF) 시절인 1998년부터 광주은행 재정상태가 극도로 취약해지면서 4418억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2001년 3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 명칭만 지방은행으로 전락했다. 이 시절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산업체 등 모든 분야에서 시련을 겪었던 시기였다.

금융당국은 지방과 국가금융 정책이 유연성을 갖고 구체적인 로드맵에 의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정책을 결정·집행하면서 지방금융 육성 정책을 도외시키고 국가금융 정책만 집중한다면 국가금융, 경제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맥락으로 지역금융을 육성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국가금융 발전의 기본임을 금융당국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에서 지방은행은 당연히 지역자본에 인수돼 지방은행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은행은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된 2001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055억

원에 이르는 지역의 견실한 지방은행이다. 때문에 영업실적의 역외유출을 막고 우리 지역에 재투자하여 지역금융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금융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광주은행을 지방은행으로 환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전남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지난 2005년부터 지역자본으로 지방은행 인수를 추진해 왔다. 광주시, 전라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 지역의 각 경제주체와 지역민이 함께 할 때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향토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복잡하고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일괄매각으로 변경하는 정부의 민영화 방안은 당초부터 민영화 로드맵이 부족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우리금융 민영에서 자회사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지역금융 발전을 위해 지방은행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본래매각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원어민 강사 자격요건 2년제 대학졸업자로 낮춰야

아이들이 다니는 어학원의 원어민 강사의 자격을 두고 말들이 많다. 그 이유는 학원강사의 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해 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출신의 4년제 대학 졸업자를 구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누가 자국보다 연봉이나 기타 후생복지 등에서 떨어지는 한국에서의 학원강사를 원하겠는가. 때문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우리나라에 영어강사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인력

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4년제 졸업 원어민 강사를 어렵게 채용한다 해도 임금이나 기타 체류비를 지급하기 위해 고액의 학원비가 불가피하다. 결국, 검증된 강사의 수업을 받기 위해 일부 학원으로부터 수강생이 집중될 것이고, 수강료 상승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과 달리 우리 광주는 비롯한 대구, 부산 등 전국 지방의 학원가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학원 강의는 학문적 깊이를 논하는 차원 높은 영문학 강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제 졸업자들도 충분히 질적인 수업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자격요건을 2년제 졸업자로 낮추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학원비도 저렴해지고 지금 같은 자격 시비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학원강사의 채용 시스템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지금까지 소규모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시스템으로는 강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적 정보를 공유·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자격 시비 논란도 잠잠해질 것이다.

▲이준호·광주시 북구 운영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번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광주 정신’ 폄훼한 인물이 평등 주장이라니

‘광주 정신’을 폄훼하는 등 역사 왜곡을 일삼은 인사가 민주평등 주장으로 임명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극우보수 세력의 대표적 인물인 김현욱 전 국회의원을 민주평등 수석 부의장 자리에 앉힌 것이다.

김 수석 부의장은 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의 주축 인물이다. 또한 최근에는 5·18 기록물의 체계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반대 청원운동을 전개하는 등 광주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폄훼해 왔다. 뿐만 아니라 삼성 비리 폭로에 참여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반대 좌익단체로 규정된 카톨릭 뉴라이프 삼익의장과 자유민주주의 시민연합 공동의장을 지낸 대북 강경주의자다.

우리는 이 같이 그릇된 역사인식을 갖고 대북 강경정책을 주도한 인물이 민주평화통일 정책을 구상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도록 되어있는 ‘헌법기관’의 수장으로 적절하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물고 싶다. 특히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그동안 강조해 온 소통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에 다를 바 없다. 또한 광주·전남지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민주·평화·통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유·공감하는 가치관이자 민주평등의 정신이다. 따라서 민주평등의 수석부의장은 정치·이념·헌법적 중립성을 갖춘 인물이 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관, 미성숙한 이념체계, 편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을 지닌 인사를 수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평등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무엇보다 평등이 극우보수 과잉으로 이념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광주시민을 모독한 김 광등 부의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평등은 특정 정파나 이념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헌법기관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교육청 평가 이렇게 미흡해서야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발표한 2010년 전국 시·도교육청 성과 평가에서 광주 7개 시교육청 가운데 종합등급 4위(보통)로 전년에 비해 한 단계 하락한 반면, 전남은 9개 도교육청 중 6위(보통)로 한 단계 상승했다. 이번 평가는 교육성과와 교육정책, 청렴도 등 각 분야가 평가된데다 교육감들의 성적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육과정 선진화 부분 등에서 양호한 점수를 받았지만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 성과 등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도 학업성취도 평가 등은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방과후학교 지원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앞으로 시·도 교육감이 교육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주요 목표 내지, 과제라는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양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계는 긍정적 면도 많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다. 특정 세력과 친정체제 인사로 논란을 자초하고 교육계를 속대 받으로 만든 대형 비리와 도덕적 해이 등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다.

시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를 이유로 금지된 심화반 운영과 0교시 수업, 방과 후 야간자율학습 단축 등도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다.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그만큼 수박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 결과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양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현실과 문제점을 여과없이 살피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제1공약인 비리 척결에 최우선을 뒀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비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또 진보교육감으로서 이상론에 너무 치우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에 따라 교육을 실행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두고두고 새겨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86년 브루스커밍스 교수의 '한국전쟁의 기원'(원제·the Origins of the Korean War)이란 책이 나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대학 1학년생이던 기자도 선배의 권유로 이 책을 접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낯익은 어휘와 문장은 '한국전쟁'이란 뜻의 영문과 함께 'Korean War'라고 적혀 있었다. 반면 베트남전쟁에는 '이가지 낯익은 어휘와 문장은 'Vietnam War'로 표기돼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베트남전쟁은 베트남 사람을 뜻하는 'Vietnamese'라고 하지 않은 반면 한국전쟁은 한국인을 의미하는 'Korean'으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김병설 연세대 교수가 'Korean War'가 국학을 국제사회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막강한 영향력은 6·25에 대한 명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전까지만 해도 '한국전쟁' 혹은 '6·25전쟁' '한국전쟁' '한국동란' 등으로 혼용돼 왔으나 커밍스 교수가 한국전쟁(Korean War)으로 사용한 후로는 학계와 언론·

한국전쟁



War'로 표기돼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베트남전쟁은 베트남 사람을 뜻하는 'Vietnamese'라고 하지 않은 반면 한국전쟁은 한국인을 의미하는 'Korean'으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김병설 연세대 교수가 'Korean War'가 국학을 국제사회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막강한 영향력은 6·25에 대한 명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전까지만 해도 '한국전쟁' 혹은 '6·25전쟁' '한국전쟁' '한국동란' 등으로 혼용돼 왔으나 커밍스 교수가 한국전쟁(Korean War)으로 사용한 후로는 학계와 언론·

War'로 표기돼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베트남전쟁은 베트남 사람을 뜻하는 'Vietnamese'라고 하지 않은 반면 한국전쟁은 한국인을 의미하는 'Korean'으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김병설 연세대 교수가 'Korean War'가 국학을 국제사회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막강한 영향력은 6·25에 대한 명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전까지만 해도 '한국전쟁' 혹은 '6·25전쟁' '한국전쟁' '한국동란' 등으로 혼용돼 왔으나 커밍스 교수가 한국전쟁(Korean War)으로 사용한 후로는 학계와 언론·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1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문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